2026년 4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o 일시 및 참석인원

일 시	참 석 인 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o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정원	4/5	[뉴스투나잇] 쿠팡 이어 배민도…계속되는 플랫폼 기업 정보 유출 [뉴스투나잇] 각지서 오물 테러…텔레그램 타고 '보복 대행' 범죄 확산	
김홍태	4/12	[와이드17] "호르무즈 통과 조건, 선박·국가별 상이" [뉴스현장]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지역별 차등요금제 올해 도입	
김경아	4/19	[뉴스투나잇]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탈출…도심 활보 "주의" [뉴스오늘] '탈출 늑구' 나흘째 행방 묘연…"무사 귀환 응원"	
안지연	4/26	[뉴스투나잇] 또 오르는 유류할증료…여행지 바꾸고 미리 끊고 [뉴스1번지] 이명·안면마비 등 코로나 백신 부작용 추가 인정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있음'

구 분	성 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 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	2018. 06. 28	-
활동	안지연	동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초빙교수	2023. 01. 31	-
활동	김정원	한양대학교 ERICA 미디어학과 교수	2025. 08. 21	-
활동	김경아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26. 02. 20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6 4/5(일)	김정원	쿠팡 이어 배민도…계속되는 플랫폼 기업 정보 유출 김선홍 기자 입력 2026-03-30 23:27:43 쿠팡에 이어 배달의 민족에서도 하청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37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이어, 배달의 민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복테러 대행 일당이 조직원을 배민 CS 담당 하청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등 약 1천여 건의 고객 정보를 빼낸 것입니다. 배민 측은 이상 조회에 대한 소명 요구와 연 1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업무 외 개인정보 접근 시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민은 외주업체와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상담인력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입 시 인증 목적으로만 수집하고 보관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 보도는 쿠팡과 배민 사례를 연결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구조적 문제임을 짚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술적 대응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한 점도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후 보도에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에 대해 현행법상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상감지 시스템 의무화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의 법제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면 보도의 사회적 역할을 한층 더 했을 것입니다.	
2026 4/12(일)	김홍태	"호르무즈 통과 조건, 선박·국가별 상이" 송고2026-04-05 18:14 김민아 기자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이 선박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고 밝히면서, 자유항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중동 전반을 총괄하는 중동전담대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의 파나마 선적 LNG 선박에 이어 인도 선적 유조선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 해운사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외교부가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의 '선별 통과 방침'에 직접적이고 별도의 협상보다는 유사입장국들과의 '다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국제규범에 따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항행,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관련국들과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쟁이 장기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연합뉴스 TV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전황을 다각적으로 빠르게 전달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우리 선박을 포함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보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 및 전문가에 대한 지속적 취재를 통해 정책 대응 동향을 빠르게 보도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해당 기사 역시 이러한 연장선에 있는 보도로서,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 중동 전담대사 임명 등에 대해 충실한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언급하신 호르무즈 해협 선박의 세부 정보 등 역시 후속 및 관련 보도에서 소개됐던 내용으로, 향후에도 풍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전담대사'를 곧 임명한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중동 평화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기여 확대를 위해 적절한 부내 인사를 인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근무 경험이 있고 현재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외교부 1급 인사들 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동 담당 본부대사는 '정부대표'로 활동할 예정인데, 현재 청와대 등의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일본·인도 선박의 통과 사례와 한국 선박의 억류 상황을 대비시켜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부각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공식 언론 공지를 직접 인용해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양자 협상보다 다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도 비교적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중동 전담대사 임명 예정이라는 후속 조치까지 연결해 보도를 마무리한 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구체적인 경위, 억류 기간 그리고 선원 현황이 빠져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와 한·이란 간 외교 현안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확보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마무리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2026 4/19(일)	김경아	탈출 늑구' 사흘째 행방 묘연…"무사 귀환 응원" 2026. 4. 10 천재상 기자	

		지난 8일, 대전의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소식은 인근 주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가진 맹수가 도심 인근을 배회한다는 소식에 학교는 문을 닫고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했는데요. 처음 늑구의 탈출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맹수 습격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공포는 어느덧 '무사히 돌아오라'는 간절한 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연합뉴스TV는 어떻게 포착했을까요? 8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 오월드에서 사육 중이던 30kg 무게의 수컷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 틈새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늑대는 동물원 울타리를 넘어 도심 사거리까지 진출해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수색 현장에 경찰과 소방, 동물원 직원 등 총 24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추적 중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취재진은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정문을 폐쇄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 교육 현장의 대응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발생한 퓨마 탈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동물원의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늑구가 야생 사냥 능력이 없어 폐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늑구 응원 열풍과 대통령의 언급, 심지어 가상화폐 시장의 반응까지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보도는 도심 사거리에서 늑대가 실제 활보하는 영상을 확보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와 위험성을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8년 과거 사례를 소환해 안전 관리 부실을 짚어준 점은 보도 전문 채널로서 적절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전 오월드 동물원 탈출 늑대와 관련해 첫 보도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 보도했습니다. 또 이튿날 인근학교 휴교령과 행정기관의 안전문자 등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다만 관련보도가 탈출늑대 포획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면서 주민 안전수칙 등은 깊이있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향후 보도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시 주안점을 두고 보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늑구에 대한 응원과 화제성에 보도의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 수색 지역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조우 시 대처법 등 실질적인 안전 정보 제공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감성적인 접근만큼이나 실무적인 안전 보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2026 4/26(일)	안지연	또 오르는 유류세에…여행지 바꾸고 미리 끊고 2026. 4. 17 한웅희 기자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항공권 부담이 커지자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여행지를 바꾸거나 항공권을 미리 결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직항 대신 경유를 택하거나 장거리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등 중국,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값이 두 달 만에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 뉴욕 노선의 경우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112만 8천 원으로, 3월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오른 수준이며,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3단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상된 유류할증료는 결제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4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미리 결제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이 여행객의 실제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	중동 전쟁 여파로 일시적으로 폭등하는 상황이라 조기 결제 등 당장의 상황에 대한 내용은 리포트에 담겼습니다. 얼마나 지속될지 등 장기적인 관점의 리포트는 중동 사태 상황에 따라 관련 부서 또는 저희 부서에서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담이 커졌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직항 대신 경유를 택하거나 여행지를 조정하는 사례를 통해 비용 상승이 여행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섰고, 실제 노선별 부담도 크게 커졌다는 수치를 함께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까지 짚으면서, 시청자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까지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다만 보도는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여행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이런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설명까지 함께 제시됐다면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항공권 가격 부담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까지 덧붙여졌다면, 시청자가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정원 시청자평가원(26. 04. 0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4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정원입니다. 쿠팡에 이어 배달의 민족에서도 하청 직원이 고객 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면서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37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에 이어, 배달의 민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복테러 대행 일당이 조직원을 배민 CS 담당 하청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등 약 1천여 건의 고객 정보를 빼낸 것입니다. 배민 측은 이상 조회에 대한 소명 요구와 연 1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업무 외 개인정보 접근 시 관리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민은 외주업체와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상담인력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입 시 인증 목적으로만 수집하고 보관 자체를 하지 않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이 보도는 쿠팡과 배민 사례를 연결해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이 구조적 문제임을 짚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기술적 대응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한 점도 보도의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에 대해 현행법상 원청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상감지 시스템 의무화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의 법제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까지 제시했다면 보도의 사회적 역할을 한층 더 했을 것입니다. 최근 남의 집 앞에 오물과 각종 쓰레기를 뿌리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잇따른 검거에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범행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 페인트와 오물이 뿌려지고 비방 유인물이 수십 장 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건당 80~100만 원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30대 A씨 등 3명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이 같은 보복 대행 범죄는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뤄지며, 수도권은 물론 대구·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박, 불륜, 학교폭력 가해자 등 말 못 할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다'는 홍보글까지 올리며 의뢰자를 모집하고,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외주업체에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피해자 주소를 빼내는 등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직의 총책이 검거됐지만 유사 범행은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은 상선 추적과 수사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이 보도는 현장 영상과 피해자 인터뷰를 통해 보복대행 범죄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의뢰자 모집 방식과 개인정보 탈취 수법까지 구체적으로 짚어 범죄의 구조적 특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을 통한 범죄 의뢰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지, 또 의뢰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이 범죄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

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 여름방학부터 전국 초·중·고 학생 7,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처음 제공합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여름방학부터 SNS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초·중·고 학생 7,2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정서·행동·미디어 사용 습관 변화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학령 전환기인 초4, 중1, 고1 학생이 주 대상이며, 신체 활동과 명상, 교육을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조절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관련 예산으로 2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정부가 전국 규모의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청소년 SNS 중독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해·자살을 시도한 19세 이하가 10년 사이 6배 넘게 급증했고, 전문가들은 SNS에 범람하는 관련 콘텐츠가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했고, 국내에서도 연령별 사용 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중독 예방 관련 법안 7개가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모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정부의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전하면서 청소년 자해·자살 통계와 해외 규제 사례까지 폭넓게 담아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배경을 함께 짚어 균형 잡힌 구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7,200명이라는 대상 규모가 전체 과의존 위험군에 비해 충분한지에 대한 평가가 빠진 점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름방학 한 차례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굳어진 미디어 습관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사후 관리와 지속적인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었다면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 분명하게 따져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관련 법안 7개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짚었다면 입법 공백의 문제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부가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5조 원이 넘는 추경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부터 이른바 '숨고르기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까지 담겼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민생안정 명목으로 2조 8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 복지 확대, 생필품 지원 센터 전국 300곳 확충,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취업 준비를 잠시 멈춘 이른바 '숨고르기 청년'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맞춤형·단계별 지원도 본격화합니다. 중동 사태로 피해를 입은 산업과 공급망 안정도 이번 추경의 큰 축입니다.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을 두 배로 늘리고 기업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정책 금융도 강화합니다. 농축수산물과 문화·숙박 분야 할인 지원에도 재정을 투입해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선별 지원이라는 설명과 달리 지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추경 성격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5조 원 규모 추경의 주요 내용을 민생, 공급망, 청년 지원 등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추경 성격을 둘러싼 엇갈린 해석도 함께 전달해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숨고르기 청년'이라는 생소한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층을 지칭하는지, 기존 청년 지원 정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정책의 의미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추경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보완했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더 냉정하게 따져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위기 대응을 위해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33년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 상황을 초유의 위기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내란·외환·천재지변 등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을 내리고 국회 사후 승인을 받는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실제 사용된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가 마지막입니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극복할 방안을 연구하라"며 "법도 바꾸고 시행령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소·헬륨·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를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당부하는 한편, 내각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보도는 긴급재정명령의 법적 근거와 역대 사용 사례를 설명하며 대통령 발언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3년 만에 거론됐다는 역사적 맥락을 짚은 점도 시청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긴급재정명령이 실제로 발동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국회 사후 승인이 부결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등 제도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보완됐다면 시청자들이 이 권한의 실질적 의미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당 등 정치권의 반응이 전혀 담기지 않아 긴급재정명령을 둘러싼 논쟁적 성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46년간 유지돼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권한을 사실상 폐지하고 국민 300명 이상이 모이면 직접 불공정 기업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후 46년 만에 전속고발제가 대대적 손질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300명 이상 국민과 30개 이상 사업자가 뜻을 모으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발권 전방위 확대에 따른 남용 가능성과 이로 인한 경제 위축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경영계는 소극 경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폭넓은 의견 청취를 요청했고, 국무회의에서도 법무부와 산업통상부가 남용 가능성과 기업 현장의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추후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보도는 전속고발권 개편의 배경과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경영계와 관계 부처의 우려까지 균형 있게 담아냈습니다. 한편 전속고발권 폐지가 실제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분석이 보완됐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인 만큼, 고발 남용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무엇인지도 함께 짚었다면 시청자들이 이번 개편의 득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6. 04. 1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조건이 선박과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고 밝히면서, 자유 항행을 위해 관련국들과 소통 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중동 전반을 총괄하는 중동전담대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의 파나마 선적 LNG 선박에 이어 인도 선적 유조선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황이지만, 아직 우리 해운사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한 가운데, 외교부가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언론 공지를 내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 측의 '선별 통과 방침'에 직접적이고 별도의 협상보다는 유사입장국들과의 '다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국제규범에 따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항행,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하에 관련국들과 소통,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중동 전담대사'를 곧 임명한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중동 평화 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기여 확대를 위해 적절한 부내 인사를 인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근무 경험이 있고 현재 보직을 맡고 있지 않은 외교부 1급 인사들 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동 담당 본부대사는 '정부 대표'로 활동할 예정인데, 현재 청와대 등의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일본·인도 선박의 통과 사례와 한국 선박의 억류 상황을 대비시켜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부각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공식 언론 공지를 직접 인용해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양자 협상보다 다자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외교 전략의 방향성도 비교적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중동 전담대사 임명 예정이라는 후속 조치까지 연결해 보도를 마무리한 점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만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구체적인 경위, 억류 기간 그리고 선원 현황이 빠져 있어 상황의 심각성이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 통과를 허용하지 않는 구체적 이유와 한·이란 간 외교 현안도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라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 확보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마무리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뉴스현장에서는 중동전쟁 여파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이 골자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전력 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고, 산업구조나 수송, 건물 등 모든 영역을 전기화하겠다는 건데요, 김성환 기후 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정책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가장 먼저 제시한 목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 37기가와트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에는 100기가와트까지 두 배 넘게 늘리겠다는 계획이며,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현장과 이동 수단을 대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추진되는데요, 철강 산업은 2028년까지 탄소 덩어리 대신 수소를 이용해 철강을 생산하는 수소 환원 제철 실증 설비를 갖추고, 석유 화학 분야에서는 전

기를 활용해 나프타를 분해하는 설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채우기 위해 경찰차와 택시, 렌터카 등의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당장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시간대로 소비를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요금제도 올해 안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에너지전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송전 비용과 지역별 자립도를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석탄 발전 전환 로드맵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안을 담은 정책을 올 하반기까지 차례로 발표해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방대한 정책을 핵심 위주로 압축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중동전쟁이라는 국제 정세와 에너지 안보를 연결해 정책 발표의 배경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37기가가 100기가와트로, 신차의 40%가 전기·수소차, 석탄발전소 60기 2040년 폐지 등 구체적으로 정책의 규모와 방향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수송·건물 등 전 분야를 망라한 전환 계획을 체계적으로 전달한 점도 돋보입니다. 앞으로는 정책 발표를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리고 재원 조달이 쉬운지 까지 함께 다룰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특히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시간대별 요금제는 시청자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와 예상되는 요금 변화도 시각화해 전달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보도는 후속 보도를 통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세부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와이드17에서는 최근 '약물운전'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지만, 약물운전 사례 중 96%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면서, 보다 정교한 단속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차량 한 대가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추락하는데요, 차량 파편들 사이 약물주사기가 발견됐고, 운전자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서울 가양동에서도 약물 운전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는 등 최근 약물운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위험은 불법 마약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에서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23년부터 3년간 약물운전 1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약물의 절반 이상이 의료용 마약류로, 의료용 마약 중 수면제 '졸피뎀'이 최다였고, 비마약류는 40%를 넘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도 복용 후 운전이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단 지적도 나오는데요, 약물운전은 소변이나 혈액의 약물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음주운전과 달리 현장에서 이를 바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후 감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시간 단속이 어렵단 의미인데요, 이 외에도 사고를 유발하는 약물의 투약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차도 크다는 게 한계라고 합니다. 조혜영 한국약제학회 회장은 수치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문제가 있느냐는 기준점을 알아야 되는 거고, 측정은 미량 분석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마저도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경찰은 국과수 등에 혈중 농도와 운전금지 기준 연구를 의뢰했으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실제 사고 사례로 제시하면서, 특히 '96%가 합법 처방약'이라는 점을 강조해 일상 속 위험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까지 짚은 점도 탄탄한 구성으로 보이며, 단순 범죄 보도를 넘어 제도적인 부족함을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약물이 운전에 특히 위험한지, 복용 후 얼마 동안 운전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해 보였는데요, 해외의 약물 운전 기준이나 단속 방식, 약 포장지 경고 문구 등 정보가 추가됐다면 한결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자가 약을 복용하면서 알아야 할 점과 의료진이 안내해야 할 점 등도 함께 다뤘다면 보다 효과적인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방약이라도 졸림이나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약 복용 후에는 운전을 자제하는 등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도 꼭 필요한 멘트였습니다. 뉴스13에서는 지난해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등 다른 지역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원정 매입 비중이 약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2만810건 중 다른 지역 거주자의 매수는 3,914건으로 18.8%였는데요, 이는 직전 4개월에 비해 5%포인트 가까이 감소한 것이고, 약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10·15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며 실거주 의무로 전세를 낀 '갭투자' 형태의 매수가 원천 차단된 영향이 커 보인다며 보도를 마무리 했습니다. 위 보도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명시하고, 4개월간 2만810건이라는 정책 효과를 수치로 검증해 신뢰도를 높이면서, 10·15 대책,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갭투자 차단이라는 정책의 인과관계도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정 매입 비중이 최저라는 결과외에,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전반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궁금한 부분입니다. 추후 보도에서는 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과 거래량 여부, 그리고 투자 이동 현황도 함께 짚어주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규제 강화로 외지인 매수가 줄었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따르므로,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규제 여부와 실거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평가 였습니다.

● 김경아 시청자평가원(26. 04. 1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김경아입니다. 지난 8일, 대전의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소식은 인근 주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야생의 본능을 가진 맹수가 도심 인근을 배회한다는 소식에 학교는 문을 닫고 주민들은 외출을 자제해야 했는데요. 처음 늑구의 탈출 소식이 전해졌을 때만 해도 우리는 맹수 습격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공포는 어느덧 '무사히 돌아오라'는 간절한 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연합뉴스TV는 어떻게 포착했을까요? 8일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 오월드에서 사육 중이던 30kg 무게의 수컷 늑대 한 마리가 울타리 틈새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늑대는 동물원 울타리를 넘어 도심 사거리까지 진출해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수색 현장에 경찰과 소방, 동물원 직원 등 총 24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어 추적 중인 상황을

전했습니다. 특히 취재진은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정문을 폐쇄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한 교육 현장의 대응 상황을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발생한 퓨마 탈출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동물원의 반복되는 안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늑구가 야생 사냥 능력이 없어 폐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늑구 응원 열풍과 대통령의 언급, 심지어 가상화폐 시장의 반응까지 입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 보도는 도심 사거리에서 늑대가 실제 활보하는 영상을 확보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와 위험성을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또한 2018년 과거 사례를 소환해 안전 관리 부실을 짚어준 점은 보도 전문 채널로서 적절한 감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늑대의 행방만을 쫓는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과 정치권,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두루 살피며 이 사건이 대중에게 소비되는 방식을 조명한 기획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는 뉴스에 대중적 흥미를 더함과 동시에 사건의 파급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보도입니다. 하지만 늑구에 대한 응원과 화제성에 보도의 무게중심이 쏠리다 보니 수색 지역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나 조우 시 대처법 등 실질적인 안전 정보 제공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감성적인 접근만큼이나 실무적인 안전 보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늑구 코인의 등장은 자칫 투기적인 양상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보도 전문 채널로서 이에 대한 경계 섞인 분석이나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을 지적하는 관점이 곁들여졌다면 더욱 균형 잡힌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널뛰고 있고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정부가 26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사는 곳과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지원 대책의 상세한 로드맵을 연합뉴스TV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총 6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약 3,256만 명입니다. 지급 시기는 오는 4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은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 계층 등은 45만 원을 기본으로 받게되구요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온라인이나 지자체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복잡한 지원 금액 체계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시청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 추가 지원과 같은 세부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짚어준 점은 정보성 측면에서 우수했습니다. 또한 출생년도 요일제 등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를 미리 고지하여 시청자의 편의를 도왔습니다. 보도는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절차적 안내는 충실했지만 고액 자산가 제외라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내용은 '내가 70%에 해당할까?'일텐데요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더 상세히 다뤘어야 합니다. 또한 6조 원이 넘는 유동성이 시장에 풀렸을 때 추가적인 물가 상승과 같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균형 잡힌 분석이 있다면 정책을 다각도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동 정세의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에너지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곧 우리 장바구니 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한편, 에너지 절감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자 경제단체와 경제계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직접 서울 도심에서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경제계 전반에 확산 중인 에너지 절약 기조도 상세히 다뤄졌습니다. 현재 50여 개 기업이 차량 부제와 소등은 물론 화상 회의와 재택근무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보도는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수송용 석유 3% 감축이라는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과 함께 일상 속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고유가 지원금과 같은 정부의 대책 보도와 맞물려 민간의 사전 예방 노력을 조명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경제계가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해 사회적 연대감을 강조한 점이 좋았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경제계 소식을 가두행진이라는 역동적인 현장 화면과 쇼츠 영상을 함께 구성해 몰입도를 높였고 에너지 절약이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화적 코드임을 잘 짚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실제로 추진하는 고효율 설비 전환이나 에너지 감축 목표 수치 등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부족했습니다. 캠페인이 단순한 홍보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절감 기대 효과가 수치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사원이나 길거리에서 캠페인을 목격한 시민들의 생생한 반응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시청자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평범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비중 있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대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을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치밀한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일본의 범죄 조직 야쿠자가 개입된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 밀수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일본 야쿠자 조직인 '쿠도 카이자' 소속의 재일교포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태국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에 대마 636kg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는 국내 유통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27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베트남 호찌민에 거점을 둔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지급하고, 냄새 차단과 부피 감소를 위해 진공포장기로 여러 번 압축 포장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굳게 잠긴 컨테이너를 강제로 개방하는 현장 영상과 빼곡히 쌓인 박스 등 시각적 증거를 확보해 보도함으로써 사건의 실체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야쿠자의 개입과 해외 범죄 조직과의 공모 실태를 보도함으로 범죄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범죄 수법의 치밀함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범죄자들의 능력을 과대포장하거나 모방 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 전달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마약이 태국에서 인천항까지 들어오는 과정에서 국가 검역 및 통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혹은 왜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사각지대에 대한 분석이 있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마약류 범죄 보도는 경각심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약 유통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나 정부의 대응 체계에 대한 정보를 함께 보도한다면 공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경제 기상도라 불리는 IMF의 4월 세계경제전망이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받아든 1.9%라는 성적표는 과연 안심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연합뉴스TV 보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과 동일한 1.9%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선진국 평균인 1.8%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보다 0.2%포인트 낮은 3.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등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MF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세계 성장률이 2% 안팎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도는 IMF의 수치만을 단순히 전달하지 않고, 한국은행 총재의 인터뷰와 OECD, 외국계 투자은행의 전망치를 조밀하게 비교하여 시청자들이 현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도록 균형을 잡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동산 에너지 수입 비중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의 전망치가 기관마다 엇갈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IMF와 나틱시스 사이의 0.9%포인트라는 간극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IMF는 왜 낙관론을 유지하는지 반대로 투자은행은 왜 비관론을 펴는지 그 논거의 차이를 심도 있게 파고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거시 지표 보도는 자칫 시청자의 일상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가 향후 금리 정책이나 가계 부채 일자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활 밀착형 분석이 후속 보도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평가 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6. 04. 26.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75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 항공권 부담이 커지자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여행지를 바꾸거나 항공권을 미리 결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또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여행객들은 직항 대신 경유를 택하거나 장거리 여행 계획을 변경하는 등 중국, 일본처럼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으로 목적지를 바꾸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값이 두 달 만에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 국내 항공사들이 국제선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 뉴욕 노선의 경우 다음 달 유류할증료는 112만 8천 원으로, 3월과 비교하면 5배 넘게 오른 수준이며,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33단계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상된 유류할증료는 결제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4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미리 결제하려는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상이 여행객의 실제 선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담이 커졌다"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직항 대신 경유를 택하거나 여행지를 조정하는 사례를 통해 비용 상승이 여행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최고 단계인 33단계까지 올라섰고, 실제 노선별 부담도 크게 커졌다는 수치를 함께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결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까지 짚으면서, 시청자가 지금 어떤 판단을 하게 되는지까지 생각해볼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다만 보도는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여행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이런 흐름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소비자가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설명까지 함께 제시됐다면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항공권 가격 부담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전망까지 덧붙여졌다면, 시청자가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일부 확대됐습니다. 새롭게 인정 대상에 포함된 질환들이 생기면서, 피해 구제 범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일부 이상 반응이 추가로 공식 인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명과 안면마비, 이상 자궁 출혈, 얼굴 부종 등 15가지 질환이 새롭게 인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들 질환은 진료비 지원 대상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재심 신청 등을 거쳐 사망보상금과 간병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도는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되는 질환이 다를 수 있고, 신규 신청의 경우에는 발생 시기 등을 따져 별도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보상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만 시청자가 보도만 보고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설명이 다소 압축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어떤 이상 반응이 새로 인정되는지, 백신 종류에 따라 인정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존의 '지원'과 '보상'이 피해자에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심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신규 신청 시 별도 판단이 필요한 경우까지 함께 풀어줬더라면, 제도 변화의 실제 적용 범위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보도는 정책 변화의 의미를 짚어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정작 시청자가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무엇이 인정되고,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정 사례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면 시청자가 내용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위험 행동이 점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와 흡연,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등 청소년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술은 중학교 1학년, 담배는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점에 처음 접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19~2024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를 인용해 술을 한 모금이라도 처음 마셔본 비율은 중학교 1학년 진급 때 15.6%로 가장 높았고, 담배 신규 사용률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에 3.29%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된 사례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적발된 사례는 2만 8천여건인데, 이 가운데 10대 적발 건수가 57.1%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보유해야 하지만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보도는 일상과 청소년의 위험 행동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청소년의 위험 행동이 일상 가까이에 스며들어있다는 점을 통계 결과를 통해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술, 담배에 대한 노출과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

허 운전 사례를 통해 청소년 위험 행동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청소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예방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이 보도들은 모두 현황과 수치를 제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이나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청소년을 둘러싼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중동 사태의 여파가 국제 유가나 원자재 시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골목 상권의 부담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며 아이스 음료 수요는 늘고 있지만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 같은 필수 소모품 가격도 치솟고 수급까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중동 사태의 여파가 우리 골목상권 카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가격이 뛰자, 포장재 납품가가 크게 올랐고 비싼 값을 줘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우선 원가 상승분을 감내하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급난 장기화를 우려해 선구매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원자재 수급난이 5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사재기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 금지를 고시했는데, 포장 용기 수급 불안이 심해질 경우 관련 품목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중동발 악재가 골목상권의 경영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특히 나프타 가격 상승이 포장재 수급 불안과 납품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현장 사례를 통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보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찾는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국제 정세의 변화와 연결해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중동 사태가 우리 일상과도 맞닿아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보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단순히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상을 비추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평가 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4월 5일 04시/ 김정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4월 12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일시/장면설명	일시/장면설명
2026년 4월 19일 04시/ 김경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2026년 4월 26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
	